

전주 탄소산단 입주 가능 업종 확대

시, 드론·방산 분야 추가로 기존 193개→203개로 입주 범위 확대... 투자유치 탄력 기대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가 산단 유치 가능 업종에 최종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고시에 따르면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탄소산단 입주 가능 업종은

기존 193개에서 총 203개로 확대됐다. 특히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65만60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국가산단은 도심 내 위치해 정

주 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주IC와 인접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인근의 연구·혁신기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시는 본격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두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

의 입주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입주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선택지가 넓어져 산단 분야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재능 나눔을 실천할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자원봉사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실천형 재능 나눔 확산 도모

전주자원봉사센터, '재능 나눔 특화교육'으로 전문 봉사자 양성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가 올해도 배워서 남 주는 전문 재능 봉사자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재능 나눔을 실천할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2026년도 자원봉사 특화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화교육은 재능기부 기반의 전문 봉사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해어 커트 및 미용 기술을 익혀 현장 봉사에 활용하는 '이·미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 및 수납 기술을 배우는 '정리수납' △제과·제빵 실습을 통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제과 제빵' △풍선 제작과 연출을 활용한 체험형 봉사를 진행하는 '풍선 아트'의 총 4개 과목으로 운영된다. 과목별 정원은 20명이며, 이날 첫 교육을 시작으로 총 30시간 과정

으로 진행된다.

특히 센터는 교육생들이 수료 후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필수적으로 연계해 교육 효과와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들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활동처 및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전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재능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특화교육을 무료로 운영해 왔으며, 매년 2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며 지역사회 재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특화교육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전방위 절감 대책 추진

출근 버스 투입·대중교통 활성화 등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

전주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인 실천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입에 따른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거주 집중도가 높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 버스를 운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매주 수요일을 '대

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해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이용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선두로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 이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공직사회 전반에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주 4.5일 근무제 운영을 통해 근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육아 공무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시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도 강화한다.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공직사회가 앞장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전주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권희성 기자

지방대도시 '뭉'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행안부 찾아 강조

전주시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도시로서 실질적인 광역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섰다.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자체원 확보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교부세 추가 반영을 건의

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서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교육·문화·복지 수요를 광역시 수준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인구 감소지역에만 생할 인구가 적용되고 있어 실제 수요 대비 교부세 배분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윤 부시장은 이날 행안부에 생

활 인구·유동 인구 등 실질적 행정 수요 지표와 '5극 3특' 정책 추진 거점도시로서의 지역 특수성을 보충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윤 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총 26건, 165억 원 규모로, 윤 부시장은 이들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직접적인 현안임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충교부세 산정 기준인 자체 노력도 인센티브를 확대하

기 위해 세입 관리와 세출 효율화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보충교부세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운동목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전주시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광역적 행정 서비스 수요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생활 인구 등 실질 지표의 교부세 산정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올해의 책' 100일 필사 참가자 모집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 '전주 올해의 책'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필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14일부터 '2026 전주 올해의 책'을 읽고 기록하는 '100일 필사' 프로그램에 참가할 시민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00일 필사'는 선정 도서 속 감동적인 문구나 책 속의 장면 등을 기록하는 사업으로, 일상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다.

모집 인원은 일반시민 총 50명으로, '전주독서대전' SNS 구독 인증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도서 부문별로 △어린

이(그림) 5명 △어린이(글) 5명 △청소년 15명 △일반 25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14일부터 28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00일 필사 참가자는 신청한 도서관에 1주일 내로 방문해 도서 및 필사 노트를 개별 수령하면 된다.

이후 오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100일간 책 속의 장면이나 감동적인 문구를 자유로운 형식과 분량으로 필사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필사 활동이 끝난 후에는 도서와 필사 노트를 지정된 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